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1면	월정사·조선의 숨결에 반한 IOC 위원들	1
강원도민일보	05면	김 지사 "한국 전통음식·문화 진수 품은 월정사 기억해주길…	2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25일 원주서 청렴 서약식…“청렴한 도의회 전…	3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5일 원주서 의원총회 개최	4
강원신문	온라인	강원도의회, 2024년 의원총회 개최… 의정운영 방향 설정	5
KBS 춘천	온라인	강원특별법 관련 조례 8건 다음 달 도의회 상정	6
江原日報	21면	현대한국화협 부이사장 양숙희 강원도의원 선임	7
江原日報	13면	인제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	7
강원도민일보	23면	양숙희 도의원 현대한국화협회 부이사장 선임	7
강원도민일보	23면	도의회 경제산업위 화천 산천어축제장 방문	8
江原日報	21면	도의회 경산위 화천산천어축제장 점검	8
LOCAL세계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연찬회	9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강원자치도 해양수산특례와 비상	10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유순옥(비례) 도의원	11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1
강원도민일보	18면	양양군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확정	12
江原日報	14면	태백시의원 의정비 인상 의견수렴	12
강원도민일보	04면	평창서 IBSF 월드컵 개최 연간 10억원 경제효과 기대	13
江原日報	01면	선거구 여전히 오리무중 … 유권자·입지자 '대혼란'	13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도 폭풍전야…9년만에 감사원 칼 끝에 서나	14
강원도민일보	02면	지역전형 저조한데 임용 절벽까지…내몰리는 교육인재들	14
江原日報	06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열기 뜨겁다	15
江原日報	10면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온라인 서명 8,000명 넘어	15
강원도민일보	06면	한파에 희비교차 "찜질방 손님 껑충" "하우스 난방비 걱정"	16
江原日報	05면	거미줄 전깃줄·가스통 옆 난로 … 아찔한 전통시장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4·10 지방의원 재선거 자성 계기로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폐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폐업 속출 …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불균형·저출산 해결, 정책적 수단 총동원해야 20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종합 01면

월정사·조선의 숨결에 반한 IOC 위원들

〈국제올림픽위원회〉

GANGWON 2024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道, 사찰음식 곁들인 갈라만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찾아
'110년 만의 귀향' 여정 살펴봐

평창 오대산 월정사의 아름다움과 조선의 숨결이 담긴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IOC 위원들을 초청해 갈라 만찬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2면

IOC 측에서는 존 코츠 수석 부위원장, 니콜 호버츠 부위원장, 이기흥(대한체육회장)위원, 유승민(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위원, 김재열(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위원 등 17명의 위원과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부인 클라우디아 바흐 등 총 27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실록과 의궤 환지본처에 앞장선 김진태 지사와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심재국 평창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해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정광열 경제부지사, 진종오 조직위원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심오섭 도의회 동계특위 위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IOC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 실록 원본과 일제강점기인 1913년 반출된 이후 110년 만에 본래의 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온 여정을 살펴봤다.

이어 IOC 위원들은 월정사를 방문했고, 이들을 환영하는 '복을 부르는 월정사 탑돌이'도 봉행됐다. 한국의 전통과 멋을 담은 사찰에서 펼쳐지는 탑돌이에 IOC 위원들은 추위도 잊은 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만찬에는 사찰음식 전문가 동원 스님이 나서 강원도의 식자재를 활용한 본식 비빔밥 발우한상을 포함해 단호박죽, 버섯강정 등 제철음식 코스요리를 소개했고, 월엄 스님이 불교 기도문인 오관게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오대산은 아름다운 숲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보물들이 있고 자연과 역사가 숨 쉬는 곳이다. 이곳에서 강원의 문화, K-문화를 마음속에 깊이 담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 코츠 IOC 수석부위원장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강원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 또 월정사라는 역사적인 곳에서 만찬을 하게 돼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은 "발우공양은 세상의 조화로움과 마음의 평화로움을 되돌아보는 의식이자 수행이다. 음식의 재료들이 어우러지듯 세계인이 화합하는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강원2024취재단=최기영·김민희·김오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스포츠 05면

김 지사 "한국 전통음식·문화 진수 품은 월정사 기억해주길"

도, IOC 초청 월정사 갈라만찬
조선왕조실록 관람·사찰 체험 등
평창올림픽 이어 스포츠외교 선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존 코츠 IOC 수석부위원장, 니콜 호버츠 IOC부위원장, 구닐라 린드베리 IOC 위원과 진종오 강원2024대회 조직위원장, 신경호 도교육감,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 도단위 기관단체장을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으로 초청, 만찬에 앞서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김정호

평창 오대산 월정사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스포츠외교의 중심지로 다시 거듭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월정사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으로 초청, 오대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갈라만찬을 진행했다.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존 코츠 수석 부위원장과 니콜 호버츠 부위원장, 장 홍 조정위원장, 2018평창조정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구닐라 린드베리 위원, 이기흥·유승민·김재열 위원, 토마스바흐 위원장의 부인 클라우디아 바흐씨 등 30여명의 IOC관계자들이 한국의 사찰과 전통문화를 만끽했다.

도에서는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 심재국 평창군수,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스님, 진종오 강원2024대회 조직위원장, 심오섭 도의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특위 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위원들을 환영했다. 이들은 지난 해 개관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먼저 방문, 110년만에 평창으로 돌아온 강원의 대표 문화재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관람했다. 김경미 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왕조 500년 역사와 함께 국보로 지정된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새겼다. 이어 월정사의 대표 유산 팔각구층석탑에서 탑돌이를 하며 소원을 비는 시간도 가졌다.

대법륜전에서 진행된 만찬은 사찰음식 전문가 동원스님이 총괄, 강원의 식자재로 만든 잡곡밥·산채나물·배추콩나물국 등 발우한상과 제철음식, 오미자차 등이 제공됐다.

김진태는 영어로 인사, 코츠 수석부위원장의 88서울올림픽 참여, 호버츠 부위원장의 싱크로나이즈 코치 이력, 이상화 선수와 라이벌이었던 장홍위원 등의 인연을 언급했다. 이어 "환상적인 저녁이다. 한국은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한만큼 오늘의 월정사를 기억에 남겨달라"고 했다.

코츠 수석부위원장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강원에서 청소년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뜻깊다. 평창동계올림픽은 IOC의 좋은 본보기였는데 앞으로도 올림픽 역사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념스님은 "사찰음식은 마음의 평화로움을 돌아보는 수행과정"이라고 소개한 후 "세계인의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노력한 여러분의 헌신 덕에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한국문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며 월정사 템플스테이 참여도 독려했다. 만찬장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의 소고춤도 분위기를 돋웠다.

월정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바흐 IOC 위원장 등을 초청해 강원의 문화유산과 음식을 알렸다. 월정사는 대회 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도 제공한다. 김진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4일 (수)

정치

강원도의회 25일 원주서 청렴 서약식...“청렴한 도의회 전환 계기”

이설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도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결의대회를 연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도의원, 사무처 관계자, 원주시장, 원주시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의원총회를 연다.

도의회는 의원과 사무처의 청렴 서약식을 갖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도의회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의회 운영 결산, 올해 주요 의정 시책을 두고 토의의 시간을 갖는다.

권혁열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도의회의 의정운영 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한편, 청렴한 도의회를 만들어나가는 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종합 청렴도(1~5등급)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각각 4등급, 5등급을 받았다.

lofi@kado.net

파이낸셜뉴스

2024년 01월 24일 (수)

사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5일 원주서 의원총회 개최

강원도의회.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2024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24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사무처 직원과 도지사, 도교육감, 원주시장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의정시책과 의사운영 기본계획 보고, 주요안건 등을 논의한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의회운영을 결산하고 올해 주요 의정시책, 의사운영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주요 안건 협의와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전체의 의지를 다지는 청렴 결의대회가 열린다.

권혁열 도의장은 “이번 의원총회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의원총회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도의회의 의정운영 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한편 더욱 청렴한 도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4년 01월 24일 (수)
종합

강원도의회, 2024년 의원총회 개최... 의정운영 방향 설정

정찬범 기자

도민에게 한걸음더, 청렴결의대회 연계, 새로운 각오와 결속을 다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5일, 원주(호텔인터불고)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의회운영을 결산하고, 올해 주요 의정시책, 의사운영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주요 안건 협의와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도의원 및 사무처직원 전체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결의대회와 함께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청렴서약식 및 결의문 낭독을 통해 도의원과 사무처 전체의 청렴노력을 위한 포부와 의지를 담아 결의할 예정이다.

권혁열 의장은 “이번 의원총회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의원총회로서, 지방의회의 역량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운영 방향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한편, 더욱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정찬범 기자 gwnews@hanmail.net

명성일보, 누리일보 등 40개 언론사 보도

KBS 춘천

2024년 01월 24일 (수)

강원

강원특별법 관련 조례 8건 다음 달 도의회 상정

강원도는 다음 달(2월) 개회하는 강원도의회에 강원특별법 관련 조례들을 제출해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조례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과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 운영 조례안, 산림이용 진흥지구 운영 조례안 등 8개입니다.

이 조례들은 올해 6월 8일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인물 21면

현대한국화협 부이사장 양숙희 강원도의원 선임

양숙희(국민의힘·춘천·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사)현대한국화협회 부이사장에 선임됐다.

현대한국화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42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열고 김종선 이사장, 양숙희 부이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양 의원은 "현대한국화협회가 창립 43주년이 됐다"며 "창작에 대한 열정으로 회원과 소통하고 협회가 한국 미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지역 13면

인제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인제군재향군인회(회장:정주학)는 24일 인제문화원에서 권동용 도재향군인회장, 박현봉 인제부군수, 엄윤순 도의원, 김도형·김재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인물 23면

양숙희 도의원 현대한국화협회 부이사장 선임

화가인 양숙희(춘천·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4일 (사)현대한국화협회 42차 정기총회에서 부이사장에 선임됐다.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정기총회가

열린 가운데 양 의원은 "회원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이 한국미술 세계화에 기여할 수있도록애쓰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인물 23면

도의회 경제산업위 화천 산천어축제장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가 24일 화천 산천어축제장에 방문해 축제 진행 및 애로사항을청취했다. 사진제공=도의회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인물 21면

도의회 경산위 화천산천어축제장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는 24일 상반기 연찬회 일환으로 화천산천어축제장을 방문, 축제장 일대를 돌아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축제와 지역경제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01월 24일 (수)

LOCAL세계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연찬회

전경해 기자
화천산천어축제 참관 및 지역경제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주요 쟁점 현안 논의

▲화천산천어축제장 찾은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와 최문순 군수(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가 1월24~25일까지 이틀간 화천군 및 춘천시 일원에서 의정활동 현지 시찰 및 연찬회를 열었다. 24일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방문해 주차장, 얼음 낚시터, 실내얼음조각광장 등 축제장 일대를 돌아봤다. 최문순 화천군수와 축제 성공의 비결과 비전 등을 청취하며 차담을 가졌다. 이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축제와 지역경제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은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과 사무처 직원들

김기철 위원장은 “이번 현지 시찰을 통해 ‘세계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꼽힌 화천 산천어 축제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현장을 돌아보며 직접 느꼈다”며 “독보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축제 성공을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고 했다.

로컬(LOCAL)세계 / 전경해 기자(dejavu0057@gmail.com)

프레스뉴스, 신아일보 등 48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오피니언 19면

강원포럼

강원자치도 해양수산특례와 비상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다. 강하고 진취적인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봄을 상징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행운의 상징이며, 용기와 도전의 상징이다.

이는 올해 본격 시작되는 강원특별법 해양수산 분야 3차 개정 입법화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거침없이 진행돼 동해 바다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강원, 희망찬 강원 시대의 문을 열고 '미래산업 글로벌 해양도시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가 한창이다. 강원특별법 1차 개정은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운영이 목표였고, 2차 개정은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잡던 환경, 산림, 국방, 농업 4대 핵심규제 개선을 목표로 개정됐다.

2차 개정에 반영된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 지정 요건 완화'는 도내 항만을 북방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향후 항만 중심의 동해안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항만개발 및 해양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해양도시 조성'을 목표로 3차 개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항만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도내 항만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방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거점 및 크루즈 관광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첫 번째 할 일이 항만 배후단지 조성 및 항만공사 설립으로 항만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부산, 인천 등 5곳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고 배후단지는 항만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공간이며, 화물·관광 등 국제 교류를 위한 복합 물류 공간이다.

이번 3차 개정에 항만 분야 특례가 입법화되면 삼척부터 속초까지 특성화된 항만 개발이 가능하고, 동해안이 동북아 에너지·복합물류·관광 거점항으로 우뚝 서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도내 항만을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해 도 세입 증가는 물론 국제적인 해운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다.

또 동해항은 물동량 90% 이상이 시멘트 등 분진을 유발하는 벌크 화물로 환경 피해가 심각해 이번 특례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와 엄격한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을 반영했다. 향후 입법화된다면 주민 건강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자치도 해양수산특례의 근간은 수산산업 활성화 및 잘사는 어촌마을 조성이다. 이번 3차 특례는 업종·지역 간 분쟁 해결 및 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 조업금지구역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어획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면허양식장 이용 개발 수립' 특례도 반영했다. 어항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업인 숙원사업을 적시에 반영해 어촌·어항을 신속하게 개발하고자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특례도 추진 중이다. 최종 선정된 해양수산 특례는 총 9건으로 도의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선정했다.

강원자치도는 제2청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3차 특례 입법화가 현재 추진 중이다. 청룡의 희망찬 기운을 업고 강원자치도의회와 행정기관, 항만, 수산업 종사자가 똘똘 뭉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인물동정 14면

유순옥(비례) 도의원은 25일 오전 10시 동해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동해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인물동정 18면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속초시농협 엑스포점 대강당에서 열리는 농업인 학습단체반 및 연시총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지역 18면

양양군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확정

20년간 동결·물가상승 등 고려
여론조사 결과 65.2% "인상 적정"
군의회 조례개정 추경 예산 반영

양양군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올해부터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양운석 군이장연합회장)는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금액을 이같이 책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점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한가 150만원으로의 인상을 방침으로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었다.

이에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2%가 의정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상안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했을 경우 '적정한 금액은 얼마면 좋은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110만~120만원이 93.6%를 차지했으며, 이어 120만~130만원이 5.0%, 130만~140만원은 1.4%에 불과했다.

특히 의정비를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 연령층 가운데 30대가 74.3%로 높게 나타나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이 인상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결정으로 양양군의원들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월정수당 218만680원을 포함, 연간 총 4416만8160원을 받는다.

한편 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 내용을 군의회에 통보하고, 군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이달부터 소급 적용받게 된다. 최훈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지역 14면

태백시의원 의정비 인상 의견수렴

다음 달 7일 주민공청회
2월 중순 이후 최종 확정

【태백】태백시가 지난 20년간 동결된 태백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연다. 시는 올 2월7일 오후 3시 시청에서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의견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1일까지 발표자 추천을 받으며, 형평성을 고려해 찬반 발표자 수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됐지만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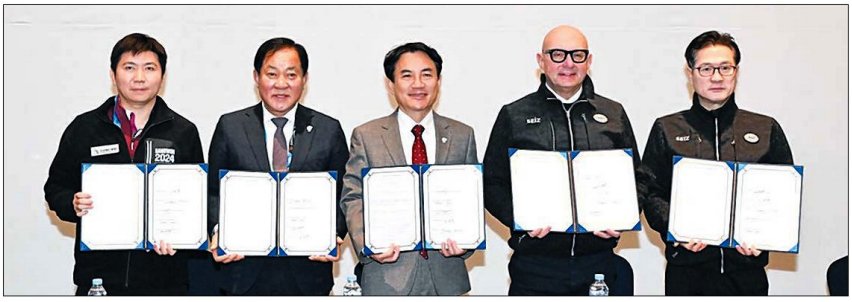
다만 법과 별개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는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월 40만원을 인상하는(안)으로 심의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마치고 2월 중순 이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광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스포츠 04면

평창서 IBSF 월드컵 개최 연간 10억원 경제효과 기대

<국제 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아시아지사·아카데미 설립 협약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모범
레저프로그램 계획 수입 다각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심재국 평창군수, 이보 페리아니 IBSF 회장, 전찬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회장, 유승민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은 24일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봅슬레이 스켈레톤 월드컵 및 아시안컵 시리즈 유치, IBSF 인증 아카데미 및 아시아 지사 평창 유치' 협약식을 가졌다. 신현태

평창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 평창올림픽테마파크와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의 아시아지사와 아카데미가 설립되면서 아시아지역 썰매종목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4일 오전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슬라이딩센터에서는 연 1회 10개국 1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IBSF 월드컵과 IBSF 주관으로 10개국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아시안컵시리즈 대회를 연 4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창을 아시아지역 슬라이딩 종목 메카로 육성하고 IBSF가 운영하는 인증 프르그램을 통해 매년 전 세계 20개국 150명 이상의 선수와 연맹관계자, 지도자들이 참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의 모범이 될 전망이다. 도내 올림픽 경기장은 총 6곳이 있지만 마땅한 수익 사업이 없어 연간 6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올림픽 경기장 운영비는 총 278억원이 들어갔다.

강원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매년 450명 이상이 평창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1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경기장 대관료 등 연간 2억원의 운영 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레저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올림픽 경기장 수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동계 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오는 3월 완료한다.

평창 슬라이딩센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루지 등 썰매종목 전용 경기장이다.

평창올림픽 개최와 함께 슬라이딩센터를 기반으로 우수선수 육성에 나서면서 강원도는 아시아 첫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한국 최초의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메달리스트 인원윤종 등을 배출했다.

특히 평창올림픽 유산을 통해 국내 선수 육성에 힘쓴 결과 한국의 동계청소년올림픽 출전 역사상 썰매 종목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한 소재환(상지대관령고), 윤성빈을 보고 스켈레톤을 시작하고 정승기(강원도청)의 조언을 받으며 성장한 신연수(상지대관령고) 등의 결실을 맺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평창 슬라이딩센터가 아시아의 동계 썰매종목 훈련의 허브로 더욱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회지원과 유산을 이어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현태·김덕형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종합 01면

선거구 여전히 오리무중 … 유권자·입지자 '대혼란'

총선 70여일 앞두고 국회서 획정안 논의조차 안 돼
20대·21대 당시보다 더 늦어진 3월 초 결론 전망도
예비후보 기존 지역구 중심 활동 속 '바뀔까 노심초사'

총선을 76일 앞두고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서 예비후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여야는 공천 경쟁의 첫 관문인 적합도 여론조사, 현지 실사 등 본격적인 공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하지만 정작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고 나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한 결론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달 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일정대로면 2월 말 혹은 3월 초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42일 전 획정된 20대 총선, 39일 전 획정된 21대 총선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지역구 선거 수를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춘천을 단독 분구하는 한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지역을 한 선거구로 합치고, 강릉과 양양을 묶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민을 비롯한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상태다. 이후 여야가 강원지역의 구역·경계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알려졌다.

도내 현역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우선 기존 선거구를 중심으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넓은 도내 지역구에서 뛰어야 하는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예비후보는 "넓은 선거구를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골이 났다"면서도 "혹여라도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공약 수정부터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는데 빨리 결정되기만을 기다린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4면에 계속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종합 01면

강원도 폭풍전야…9년만에 감사원 칼 끝에 서나

감사반 15명 구성 사전 조사중
본감사 내달 19일 잠정 예정
2021년 이후 도정 전반 대상
망상지구개발사업 등 설명 요구

강원도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본감사는 사전 조사를 거친 이후, 설 연휴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안에 따라 도내 시·군까지 포함될 가능성까지 제기돼 최종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감사원 차원의 감사는 민선8기 김진태 도정에서 이뤄지는 감사원의 첫 감사라는 점에서 감사선상에 오를 현안과 폭, 방향 등이 특히 주목된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감사원은 총 8명으로 강원도 감사반을 구성했다. 감사반은 지난 15일부터 도청에 상주해 사전 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있다. 사전 조사 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사전 조사를 거쳐 본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감사는 내달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잠정 예정됐다. 다만, 사전 조사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본감사 일정은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감사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강원도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9년 만이다. 앞서 2015년 최문순 전임 도정 당시에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다. 이어 지난 2020년에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당시엔 횡성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는 9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강원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2021년 이후 도정 사무 전반이다. 감사반은 사전 조사 기간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각 현안을 선별해 본감사 때 부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반은 도에 특혜의혹 등이 불거져 강원도 자체 감사가 진행됐던 망상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이재명 전임 경기도정의 지역화폐와 대북 교류 사업을 문제 삼았다. 이번 본감사에서도 최문순 전임 도정 사업들이 감사 대상에 줄줄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을 비롯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촉발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업체 선정 특혜 시비의 혹이 제기된 일단시켜 등 플랫폼 사업, 레고랜드 사업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도감사위에서 특정감사로 진행된 수소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건(강원테크노파크)도 본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도 관계자는 "사전 조사를 거쳐야 본감사에서 다룰 안건 등이 명확해진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종합 02면

지역전형 저조한데 임용 절벽까지…내몰리는 교육인재들

지역 존립의 마지막 열쇠 **지역인재 전형**

2. 도내 대학출신 강원교사 비율 저조

도내대 출신 중등교사 39.9%
강원지역 신규교원 임용 급감
가산점에 타지역 대학 진학도

지역 교육계도 지역인재를 외면하면서 강원지역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인원 가운데 강원도내 대학 출신은 정작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본지 취재결과 2023년 기준 강원도내 전체 중등(공립) 교사는 5999명이다. 이 가운데 강원대, 강릉원주대 등 강원도내 대학을 나온 비율은 39.9%(2399명)에 불과하다. 이 역시 각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저조와 연관돼 있다.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중 강원 출신이 적다보니 실제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도 적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강원지역 신규교사 임용 규모가 급감하면서 지역 출신 학생들은 임용을 위해 교사를 많이 뽑고 있는 경기나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강원도내 신규교원 임용 규모는 급감 중이다. 특히 지난 2019학년도 272명이던 초등 임용 규모는 지난해 93명까지 줄었고, 올해는 75명(일반 69명, 장애 6명)만을 모집하면서 교육청이 관련 자료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발한 초등신규교원(장애 포함) 359명 가운데 춘천교대 출신은 62.1%(223명)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교육청의 초등(일반) 임용 규모는 2021학년도 1106명, 2022학년도 1370명, 2023학년도 1414명을 기록하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교육청 신규교사 춘천교대 졸업자 비율(장애전형 포함)

	2021	2022	2023
신규 합격자 총인원 수	164명	102명	**93명**
춘천교대 인원 수	88명	76명	**59명** (57명중 장애2명)
신규합격자 중 춘천교대 비율	53.66%	74.51%	**63.44%**

각 교육청이 선발하는 신규교원의 경우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임용시험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이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을 늘려도 교육청이 교사를 많이 뽑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게 강원도내 대학의 입장이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예전에 강원도 신규 임용이 미달이던 시기에 도교육청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 모집인원을 늘렸다. 그러나 그 이후 매년 200명씩 신규를 뽑던게 지금은 100명도 안 뽑는다. 반면에 경기도는 교사를 많이 뽑다 보니 강원도 학생들이 출신 대학에 따른 가산점을 받으려고 처음부터 그 쪽 대학으로 진학한다"고 토로했다.

지역출신 예비교사들 역시 고향에 남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분위기다. 춘천 출신으로 현재 강원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고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벽지에서 근무하더라도 강원도에서 교사로 일하고 싶은 예비교사도 상당수"라며 "그러나 교사를 적게 뽑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 응시를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결국 지역출신의 예비교사들이 지역에 남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에 대한 추가적인 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17개 시도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이 동일한 가점을 적용받고 있으며, 중등은 전국 공통으로 지역 가산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과정에서의 지역 가점은 전국이 동일하게 운영해 강원도만 추가점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민엽·최우은·최현정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종합 06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열기 뜨겁다

건립비용 전액 국비 지원에 전국 시·군 앞다퉈 공모 경쟁 치열
춘천·철원·원주·강릉 "우리가 최적지"… 道 중재 필요 목소리

철거를 앞둔 태릉 빙상장을 대체하기 위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대한체육회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선 가운데 춘천시와 철원군, 원주시,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등 5개 시·군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강릉시는 기존의 올림픽 빙상경기장 활용을 요구하고 나섰고,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립 비용 2,000억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 출혈 부담이 없다는 점이 시·군이 앞다퉈 유치 경쟁에 뛰어든 이유로 꼽힌다.

유치 도전에 나선 지자체들은 저마다 최적의 후보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준비에 나선 춘천시는 과거 빙상 대회를 잇따라 개최한 역사성과 수도권 접근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중이다. 시유지 제공을 약속해 빠른 사업 전개가 가능한 점도 타 지자체에 비교 우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철원군은 혹한의 기후 환경이 동계스포츠에 적합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결과 철원 연장 추진으로 개선될 수도권 접근성을 앞세우고 있다. 군부대 이전으로 피해가 커진 접경지역 균형 발전의 당위성도 내세우고 있다. 원주시는 여주~원주 복선전철로 서울 강남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 것을 비롯해 2개 고속도로, KTX, 원주공항을 활용한 교통망을 최대 무기로 꼽고 있다. 또 평창, 강릉과 연계한 동계스포츠 벨트 구축 구상도 내놨다. 강릉시는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 공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기존 올림픽 경기장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1,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두고 대규모 투자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원자치도 내 경쟁부터 치열해지자 일각에서는 집안 싸움을 경계하며 조심스레 도의 중재 역할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마다 각자의 유치 필요성과 쌓아온 노력들이 있겠지만 전국 경쟁을 앞두고 도의 역량이 분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지역 10면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온라인 서명 8,000명 넘어

【춘천】속보=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춘천시의 열기(본보 지난 10일자 10면 보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기준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자는 8,374명에 이른다. 지난 12일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얻은 성과다.

오프라인 서명도 2023년 말 기준 4,000여명에 달한다. 시는 현장 실사 및 2차 심사가 진행될 3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를 위한 시민의 힘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사회 06면

한파에 희비교차 "찜질방 손님 껑충" "하우스 난방비 걱정"

염화칼슘 판매 전년대비 증가

적설량 좋아 도내 스키장 북적

상인·농민 "유류비 난감" 토로

북극한파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강원도민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도내 주요지점의 일최저기온은 철원 임남 -22.5도, 평창 면온 -20.5도, 횡성 안흥 -20.1도, 홍천 서석 -18.8도, 화천 상서 -18.7도, 북춘천 -16.5도, 북강릉 -12.3도, 속초 -12.2도 등으로 집계됐다.

▮ 반가운 추위

도내 곳곳의 일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설제 판매점 등 한파 관련된 용품점과 찜질방 등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춘천에서 염화칼슘을 판매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 작년보다 판매량이 약 20~30% 증가했다. 해당 판매점 대표는 "폭설이 내린 뒤에 한파가 찾아오면 염화칼슘 사용량이 급증한다"며 "새벽에 길이 얼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필요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원주에 위치한 24시 찜질방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 이용객이 증가했다"며 "작년보다 한 20%정도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위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얼음낚시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춘천에서 낚시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서모(69)씨는 "올해 사북면이나 신포리 쪽에 얼음이 30㎝ 넘게 얼다보니 우리 가게에도 빙어 채비를 구매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 주 많이 추워서 주말까지도 사러오는 이들이 꽤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리조트 관계자도 "최근 날이 춥고 눈이 오다보니 하루 평균 약 7200여 명이 스키장을 찾는 등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 야속한 한파

반면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업 종사자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더욱 일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고 있는 박모(32)씨는 "폭설이나 우천시에는 200원 정도 할증료를 나오지만 한파는 그런 것도 없다"며 "길까지 미끄러워서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현숙 춘천 후평일단지시장 상인회장은 "시장에 문이 없다보니 바람이 다 들어와 너무 춥다"며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온열기구 하나로 버티는데 손님도 없다보니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진다"고 하소연했다.

춘천에서 하우스 시설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55)씨는 "현재 등유와 전기를 이용해 난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날씨가 유난히 춥다보니 온도를 평소보다 낮췄음에도 200만원 어치 등유를 2주만에 다 썼다"며 "원래 한달은 더 써야하는 양인데 난감하고 앞으로도 계속 춥다고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기상청은 25일 도 전역이 중국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을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25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17~-11도, 영동 -11~-8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2~1도, 영동 1~3도로 예보된 가운데 한파는 오는 26일 오전까지 계속되겠다.

김정호·양유근·이정호·이태윤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사회 05면

거미줄 전깃줄·가스통 옆 난로 … 아찔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여전히 부실

서천 화재 227개 점포 불에 타

도내 노후전선 정비 22% 불과

알림시설 설치도 절반 채 안돼

24일 춘천시 운교동 A전통시장. 냉난방기 덮개가 떼어진 채 방치돼 있었고, 내부 전기선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천장에도 전기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한 상가 앞에는 부탄가스통 옆에 난로가 놓여 있었다. 옥내 소화전의 송수구는 벽에 단단히 고정돼 있지 않았고, 틈에는 담배꽁초가 놓여 있었다.

후평동의 B전통시장도 비슷했다. 상가마다 놓인 소화기는 노후화돼 녹이 슬어 있었고, 핀이 빠진 것도 있었다. 가스통 옆에 열 선풍기가 놓인 곳도 있었다.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점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의 전통시장 화재로 227개 점포가 불에 타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예방·대비책이 시급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사업 대상지 76곳(전통시장 63곳·상점가 13곳)중 36곳(47%)만 완료됐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리는 시설로, 지난 16일 발생한 태백 황지자유시장 화재 초기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지자유시장 상인들은 이번 화재 때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했다. 144개 점포가 불에 타는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가 지원돼 자부담액이 없지만 상인회, 시·군 지자체 등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또 다른 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업인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참여가 더 저조하다.

도내 사업 대상 시장 76곳 중 완료된 곳은 17곳(22%)에 불과했다. 도내 7,000여개 점포 중 1,249곳만 노후전선을 교체한 실정이다. 점포당 사업비 250만원 중 10%는 자부담인데, 시·군의 지원 여부에 따라 참여도가 엇갈린다. 점포 밀집도가 높은 전통시장 특성상 전체 상인들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금석 황지자유시장 조합장은 "태백시의 지원을 받아 150개 상가에 화재 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모두 마쳤다"며 "시·군 지자체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편의시설은 확충됐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화재 안전시설 구축은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에 매우 취약한 만큼 상인회 등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김태훈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사설/칼럼 19면

4·10 지방의원 재선거 자성 계기로

-양구·양양 3명 선거법 위반, 의회 신뢰 추락 법 준수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양구, 양양, 동해에서는 4명의 지방의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동해시의원 나선거구는 최명관 동해시부의장 별세에 의한 보궐선거이지만, 양구 지역구 강원도의원, 양구군의원(나선거구), 양양군의원(나선거구)은 재선거입니다. 양구군과 양양군 지방의원 선거 3건은 모두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해 치르는 것입니다. 양구지역에서는 도의원과 군의원 2명이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퇴장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겼기에 본격 선거전에 앞서 법 준수를 촉구하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1년여 만에 낙마한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역할 중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양구에서는 이번에 직을 상실한 도의원이 과거 201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4·29 재선거를 치른 전력이 있는데 반복적인 문제로 나타났기에 더 경계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낙마하고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지역주민에게 큰 손실입니다. 길게는 8개월여 업무 공백이 발생했으며, 의정활동이 지속되지 않고 단절을 불렀습니다.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유무형의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청렴해야 할 지방의회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 이미지를 실추하였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소송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역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개는 선거공보물에 허위로 사업성과를 적어넣거나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의 원인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각종 미디어가 발달해 있기에 출마자는 한 치의 허위나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막대한 공적 권한 사용이 주어지는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도 강화를 위해 선거법 준수 및 이해충돌방지,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방지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선거법 준수는 부패 없는 공직 수행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25일 (목)
사설/칼럼 19면

폐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동계청소년올림픽 날씨·안전 관리 만전을

지난 19일 개막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선수들은 갈고닦은 기량을 자랑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열정과 관람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도민들의 응원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설상과 빙상 경기 운영도 아직 큰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날씨와 위생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와 지자체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해 대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로서 가장 큰 변수는 날씨입니다. 한파와 폭설, 겨울비 등 기후 변화는 대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장은 물론, 관광지와 상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회가 열리는 지역마다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북극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파를 동반한 강풍도 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 23일엔 정선 알파인스키 여자대회전 경기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여자 6㎞ 스프린트 경기 시간이 일부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엔 폭설로 알파인 스키 등 일부 경기 일정이 변경됐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의 '원포인트 레슨'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선수와 운영 인력,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방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질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집단 발병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6일엔 개최지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검사를 진행한 6명 중 경기 심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19 등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계청소년 올림픽은 아직 1주일여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최 측은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회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선수와 관중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애로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최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경기장으로 유도하고, 시내 상권으로 동선을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행여 안일한 운영으로 대회에 오점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사설/칼럼 19면

폐업 속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지난해 도내에서 음식점 3곳이 문을 열 때 1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견뎌 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직격탄을 맞았다. 본보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통해 도내 일반·휴게음식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도내에서는 3,344곳이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는 1,164곳으로 개업 대비 폐업률은 34.8%에 달했다. 도내 일반·휴게음식점 개업 대비 폐업률은 2020년 51.5%에서 2021년 36.4%, 2022년 32.7%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높아졌다.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는 자영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다. 은퇴한 중년과 직장생활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청년층이 창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실패와 좌절에 부닥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식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의 상승이다. 식당 주인들도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서민들 역시 고물가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외식업체 경영 악화,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올해도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3년 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과반(52.3%)은 내년 소비지출을 전년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중소기업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형 창업자가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까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음식점의 위기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내리막길을 달릴 게 뻔하고 금융시스템의 부실 위험도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창업 전 교육과 금융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간판을 내리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보고만 있기에는 사정이 너무 다급하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중에 이들의 폐업률이 함께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대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음식업자들의 자구 노력이 가장 먼저겠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도 절실하다. 신용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25일 (목)
사설/칼럼 19면

불균형·저출산 해결, 정책적 수단 총동원해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23일 강원특별자치도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에 참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위협 요소로 '국가 내 불균형', '저출산'을 꼽으며 두 문제를 풀지 않으면 공동체 미래가 암울하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 그야말로 국가 내 불균형이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재론할 필요도 없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상장회사, 예금, 대학, 일자리가 몰려 있다. 과밀화된 수도권은 집값·미세먼지·도시 열섬 고통에 시달리고, 청년들이 빠져나간 지방은 읍·면·동의 40%가 30년 내 소멸될 것으로 예고됐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대거 옮겨진 2011~2015년 수도권 인구 집중이 하락·둔화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

수도권에 인구·상장회사·대학·일자리 집중
0명대 출산율 2018년 이래 7년째 지속
중앙·지방정부 긴밀 소통해 문제 해결 나서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또 어떤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2023년 상반기 0.76명이다. 국가 출산율로는 동서고금을 통해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기록이다. 더 심각한 것은 0명대 출산율이 2018년 이래 벌써 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민이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일·가정 양립 문제 외에도 청년층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젠더 불평등, 사교육비 및 보육·돌봄 부담 등 다양한 이유가 난해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지적됐지만 명쾌한 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내 불균형과 저출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대표가 참석하기에 국가 내 불균형과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제격이다. 더욱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같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분기마다 모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에 더욱 그렇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이유다. 전체 국민을 상대로 정책과 제도 설계에 집중하는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주민을 상대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된다. 중앙 부처는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고 지자체 역시 체계적이고 주체적인 적극성이 필요하다. 안건이나 논의 과정, 후속 조치에 있어 성공 사례는 지속 가능한 중앙·지방정부 협치의 틀을 담보할 것이다.